

비대면 금융 확산·비용 부담... 은행권, '점포 통폐합' 가속

최근 5년간 은행 점포 20% 감소
고령·취약계층 접근성 저하 우려
"금융소비자, 금융거래 환경 악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점포 폐쇄 내실화 대책을 내놓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올해 통폐합 점포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 21 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지점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해 가산디지털밸리지점, 구로디지털지점, 금남로지점, 대전무역회관지점, 대치남지점, 도곡스위트지점, 독립문지점, 반포서래지점, 여의도북지점, 용산역지점, 포이동지점, 학동역지점 등이 문을 닫고 인근 지



26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시장에서 정태욱 한국전자금융 상무(왼쪽부터), 장영배 청도군청 경제과장, 김경권 청도시장 상인회 감사, 이인규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은행 공동ATM 운영개시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점으로 흡수된다. 우리은행은 올해만 36개 점포를 폐쇄한 바 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전국 영업점을 대규모로 통폐합한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총 38개 영업점(출장소 4개 포함)을 폐쇄하고 인근 영업점과 합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

울은 청계·사당동·위례중앙·한남동·노원역·개롱역지점·북아현출장소 등 8개 지점이 통폐합된다. 이어 경기 지역은 천신흥·죽전보정·가능역·남천·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광고금융센터 등 6곳이 사라질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전라북도 전주

태평동 지점과 경기도 수원 권선동 지점을 없애 인근 점포와 합쳤다. 올해에만 40곳의 지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올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점포를 폐쇄했던 우리은행(36개)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신한은행 역시 다음 달 8개 점포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총 17개 점포를 통합하면서 올해만 25곳이 문을 닫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현재 5690개로 5년간 1189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수도권에서 708개, 비수도권에서 481개가 사라졌다.

전체 폐쇄 점포의 69%는 4대 은행 점포로, 점포 폐쇄 비율은 KB국민은행이 26.3%, 우리은행이 24%, 신한은행이 22.9%, 하나은행이 18.8%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비용 문제 때문이다. 코로

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영업점의 관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분담 원칙 등에 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물리적인 점포 등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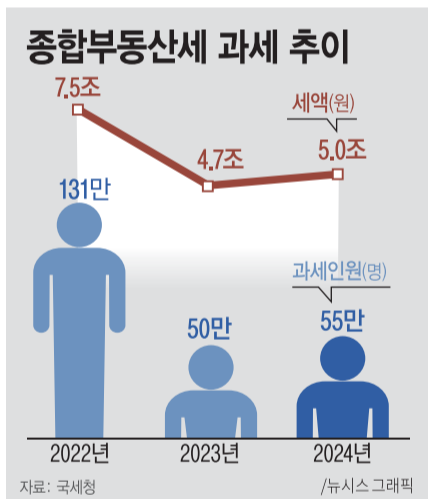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올해 종부세 납세자·세액 동반 상승... 공시가 인상 여파

기재부·국세청
납세자 55만명 납부기한 내달 16일
다주택자 4655억, 1주택자 1168억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인원이 모두 전년에 비해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중복 제외 시 54만 8000명(주택분 46만 명·토지분 11만 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만 2000명)와 비교해 12.9%(+3만 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000명으로, 작년(11만 1000명) 대비 15.5%(+1만 7000명) 늘

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작년 4000억 원보다 22.8%(+865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 원으로 작년 905억 원 대비 29.1%(+263억 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난해와 올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원과 세액의 동시 증가는 지

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만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종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4만 8000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 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 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

왜 경기도는 이렇게나 기회소득에 진심일까요?

우리 사회의 각 분야마다
가치있는 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으면
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가치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Q 경기도 기회소득 지금 신청하세요